



재정절벽 협상안 타결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부유층 증세가 포함된 재정절벽 협상안인 바이든-매킨 합약안이 2012년 12월 31일과 2013년 1월 1일 차례로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면서 미국 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던 재정절벽 문제가 해소됨.

- 조 바이든 부통령과 공화당의 매킨 상원 원내대표는 가계소득 연간 45만 달러 이상 또는 개인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의 세율을 35%에서 39.6%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유층 증세 절충안에 합의함.
- 부유층 증세의 기준이 된 가계소득 45만 달러는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25만 달러와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이 대안으로 제시한 100만 달러의 중간 수준임.
- 2012년 12월 31일 재정절벽 합의 기한을 불과 두 시간 앞두고 상원이 합의를 처리한 후 2013년 1월 1일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도 합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정절벽 위험에서 벗어나게 됨.

■ 이번 바이든-매킨 합의안 통과로 자본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과 상속세율도 일부 상향조정되고 실업수당 지급도 연장되며, 예산 자동 삭감 방안 시행은 2개월 연기됨.

- 바이든-매킨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유층의 자본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도 15%에서 20%로 상향 조정되고 500만 달러 이상 부동산의 상속세율도 35%에서 40%로 상향 조정되며, 세율 인상을 통한 조세수입은 10년간 6천억 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임.
- 또한 실업수당도 1년간 연장 지급되며, 2013년 1월 1일부터 10년간 1조 2천억 달러, 연간 1천 9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자동 삭감 되도록 한 재정지출 감축 방안은 시행을 2개월 연기하기로 함.

(Wall street journal 등, 1/2)